

[오피니언]

光日春秋

전 흥택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수 없이 번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은 사이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는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종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가 높은 전문가 집단, 언론, 정부 등이 여론을 걸러줌으로써 성숙한 토론과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 진다. 반면 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회일수록 불발적 사건이나 대중매체의 피상적 분석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의 긍정적 측면을 초래하기 쉽다. 여론의 쏠림 현상은 합리적인 정책 대안 도출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극단적인 경우 사회적 아노미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사회적 자본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은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그러나 제도적인 신뢰증진 장치만으로는 생산적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혁신은 성장의 주 원천이다. 그런데 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이디어와 기술, 자본과 경영노하우 간의 결합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체계 계약의 법적 보호와 혁신에 대한 긍정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공식적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된다. 비공식적 관계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한국인은 협연, 자연 등 연고자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연고가 없는 이웃, 낯선 사람 등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았다. 제도에 대한 신뢰 중 국회, 정당, 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도 낮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교육개혁 등 전통적인 경제, 사회정책과 함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습과 규범 등의 제약 속에서 자발적·자생적으로 형성되므로 상호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습과 규범을 개선시키려는 법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반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정책적 노력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국회, 정당, 정부 등 사회적 신뢰가 낮은 부분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 서둘러야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다.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가 원활하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소비자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된다.

시장경제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품질인증, 성능보증, 예금보험, 주가조작 거래에 대한 처벌 등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거래비용'을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적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네트워크와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은 정치, 경제 등 한 사회의 전반적 선진화 추진에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어떠할까? KDI가 실시한 '사회적 자본실태에 관한 종합적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는 개인 간의 비공식적 관계에 대한 신뢰와

예정이다. 공권력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폭력·불법 시위는 절대 안 된다.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할 5·18 기념식이 폭력·불법 시위로 얼룩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 만약 광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다면 유치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주는 과거 지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지 단체의 불법·폭력 시위로 지역 이미지가 와곡돼 기업 유치나 투자 확대에 차질을 끊은 적이 있다. 또다시 광주가 일부 단체의 시위의 장으로 변질될 수는 없다.

경찰 또한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설날은 강경대처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시민사회단체와 경찰 모두 5·18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줄속협상' 책임 떠넘기는 한심한 정부

미국산 쇠고기수입 협상과 관련, 재협상본이 비등한 가운데 협상 결과를 놓고 정부 부처간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교통상부의 책임을 거론하자 외교통상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줄속협상'으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마당에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으니 한심하다.

김 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잘못이 아니다"며 "쇠고기 수입은 통상의 문제로 협상을 이끈 것은 분명 통상 쪽"이라고 외교통상부를 경계해 과장을 일으켰다.

외교통상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문태영 대변인은

"쇠고기 협상은 위생·검역에 관한 문제로 협상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도로 이뤄졌다"며 "외교통상부는 통상문제를 다투는 부처로서 협상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총력을 모아 협상을 해도 초강대국 미국을 당해내지 못할 판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국익을 쟁기기는커녕 견여주관까지 포기한 '줄속협상'이 나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해된다.

이런 정부를 놓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강변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 퇴임한 전윤철 감사원도 책임 떠넘기기에 일침을 가했다. 전 원장은 "부처간 '네 탓'"이나 하고 있으니 매우 실망스럽다"며 "총리와 장관이 앞장서 규정률에 손발을 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줄속협상'으로 국익을 손상시킨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내세웠지만 더 큰 문제는 청와대 및 내각 일부 인사의 '자질'과 '무능'이다. 과감한 인적쇄신 없이는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기 고

이희성



제주 수학여행 버스 전복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삼가 조리를 표한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재(人災)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대책을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학교 등 행사 주최 측이 행사를 통해 레코드관(LP)에 최종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 후 광학 매체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CD 플레이어는 음파의 정보 자체를 기록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과거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안전한 목적지를 정한 후 이동선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또 버스별 이동번호, 인솔교사, 좌석 배치 계획 등도 필요하다. 인

합한 차량으로 배차하고 경사가 심하고 위험한 곳에는 새차를 배차해야 한다. 자입차 운행을 엄금하며 허가된 정비공장에서 상시 정비를 통해 차량에 안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과속·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노련한 모범 운전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행사 주최 측이 운행을 요구해도 위험한 곳은 거절하고 운행전 안전벨트 착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 교육청, 경찰)가 행사를 안전조치해야 한다. 또 버스별 이동번호, 인솔교사, 좌석 배치 계획 등도 필요하다. 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지자체 등

수학여행 대형교통사고 막으려면

솔교사는 출발 전에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동 중 가무행위는 절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로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즐음 운전을 하거나 과속 운전을 하면 반드시 경고 등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원래 계획된 도로라도 운전자가 위험해 가지 못하겠다고 하면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차량 계약 때에는 지입차가 아닌 회사 소유 직영차로 계약해야 하며 협준한 도로를 운행해야 할 경우는 새차를 배차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최근 정비 검사 결과 확인과 지정된 운전자가 자기 차를 운

전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광버스 회사가 행사를 안전조치해야 한다. 회사는 모든 차량에 대해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또 운행 목적지에 적

대형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도 보수와 과속 방지 시설 설치, 사고 예방용 단속카메라 설치, 지역 교통행정 공무원 배치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 수학여행 계획을 보고 받으면 과거 사고 사례 등을 참고해 위험한 곳이면 목적지를 변경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이 요망된다.

경찰 또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상시 경찰관을 배치하고 과속 및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서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

학교(교육청), 지자체, 버스회사, 경찰이 자기 역할을 다해 다시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슬픔에 쌓인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안전의식을 재점검하자.

〈구례경찰서장·총경〉

AI 꿈이면 안전...닭·오리 소비 촉진을

회사 직원들과 접심식사를 하려 가면서 메뉴로 삼계탕을 먹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닭고기냐고 되물었다.

순간적으로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농촌의 닭이나 오리가 AI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것을 끓여 먹으면 아무 탈이 없다. 우리나라에 AI가 처음 생긴지 몇 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AI 때문에 사망하거나 문제가 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이 그 증거 아닌가.

직원들에게 웃으면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설명해줬다. 또한 육계협회와 농촌단체에서 AI에 감염되면 20억원이라는 돈을 지급한다는 것도 설명해주었더니 그때서

믿는 눈치였다. 결국 삼계탕을 먹었다. 필자는 식사를 하면서 먹는 것 만큼은 까다롭기 짙어 없는 미군조차도 AI가 생겼을 때 닭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국민들이 이처럼 AI에 대해 겁을 먹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일부 언론에서 마치 닭고기를 먹으면 AI에 감염되는 듯 보도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해 살처분되는 닭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때일수록 도시인들이 냉정하게 대처해서 농가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황미경·목포시 수강동

학기중 휴학 때 등록금 반환-이월 선택권 줘야

대학 재학 중이다.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학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낸 등록금이 걱정된다.

대학은 등록금 이월이든 반환이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 즉 당장 가정의 살림이 조그마한 학생은 등록금을 반환받을 것이고, 반대로 반환보다 복학 후를 위해 이월시키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그게 좋을 듯해서 교무처를 찾아가 "이월하겠다"고 밝히자 학교측은 "그렇게는 안되며 반환이 가능하다"며 등록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80,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생이 휴학할 경우 대학측에서는 이미 낸 등록금을 반

기획부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유통 2200-627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